

## 한국게이츠지회, 대구시청 앞 천막농성 돌입 투기자본 흑자폐업 해고 1년 ... “산업전환 피해 보는 시민 없도록 대책 세우라”

금속노조 대구지부 한국게이츠지회가 흑자폐업 끝장을 위한 공장 앞 농성에 이어 대구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6월이면 지회가 투기자본 블랙스톤에 맞서 싸운 지 1년이 된다.

노조 한국게이츠지회는 대구의 노동자들과 5월 13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한국게이츠 폐업 투쟁 승리를 위한 대구시청 천막농성 출정식’을 열었다.

지회는 “투기자본의 흑자폐업 철회 서명에 참여한 16,000 대구시민의 마음과 함께 비장한 각오로 시청 농성을 시작한다”라며 “대구시와 권영진 시장이 대구시민을 위한 노동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노동자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회는 “금속노조 대구지부 3,000 조합원의 고용과 대구노동자·시민의 미래를 지키는 투쟁이다”라면서 “산업전환 위기에서 피해 보는 시민이 더는 없도록 대책을 세우라”라고 요구했다.

지회는 3월 한 달간 대구 시내 도보 투쟁을 벌이며 ‘대구시 해결책 마련과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16,000여 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했다. 4월 21일 위장폐업 해고 300일 만에 권영진 대구시장과 면담했지만, 기대에 미치는 답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악랄한 투기자본은 지회 조합원 19명에게 3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걸었다. 4월 2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김앤장 출신의 판사는 한국게이츠 노동자들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측의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다시 한번 인가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국게이츠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로 자동차 타이밍벨트 등 고무 부품을 생산했다. 2014년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이 인수한 한국게이츠는 매년 6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왔지만, 지난해 6월 ‘한국 내 제조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라는 발표를 시작으로 한국게이츠 대구공장은 31년 만에 문을 닫았다.

대구시민과 노동자들은 각종 혜택과 지원을 받아놓고, 고용 등 사회 책임은 피하면서 이익만 뽑아먹는 외국자본의 ‘먹튀’ 행각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 “울산시, 대우버스 매각 도와 노동자 지켜라”

## 대우버스 정상화 촉구 울산 시민단체·정당 기자회견 ... 있는 일자리도 못 지키며 고용 창출?

울산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5월 13일 오후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가 자일대우상용차(아래 대우버스) 매각을 돕고, 폐업을 막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울산지역 17개 시민단체와 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준)·녹색당·정의당·진보당이 함께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 지회와 대우버스사무지회에 따르면 사측은 이달 안에 대우버스 매각이 성사되지 않으면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배짱을 부린다.

대우버스지회와 대우버스사무지회 조합원들은 2020년 10월 공장 가동이 완전히 중단되자 울산공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며 사측에 폐업이 아닌 매각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 요구에 따라 대우버스는 매각절차를 시작했다.

노조는 사측이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대우버스는 매각을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금액과 인수희망자, 매각범위 등 매각 관련 내용은 모두 베일에 싸여 있다. 사측은 대우버스 생산공장 베트남 이전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폐업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며 사측 매각 시늉에 반발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최근 울산시가 발표한 고용창출 계획을 지적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큼 기존 일자리 지키기가 중요

하다. 대우버스 울산공장을 닫으면 하청업체를 포함해 노동자 수천 명이 고용재난을 겪는다. 울산시는 어떤 대책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울산시는 5월 3일 노동부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고용위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울산시는 자체 예산과 정부 사업비 등 82억 5천만 원을 사용해 지역 일자리 1,20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재우 대우버스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울산시민 세금으로 많은 혜택을 누린 대우버스 자본이 울산공장 문을 닫겠다는데도 울산시는 손놓고 있다며 “있는 일자리도 잃을 위기 상황에 새로운 일자리 운운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라고 울산시 무능 행정을 비판했다.

박재우 지회장은 울산시에 대우버스 매각 촉진 역할을 하라고 요구했다. 상용차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 대우버스를 인수하도록 울산시가 하루빨리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울산시에 ▲투명 공개 매각을 위한 노·사·민·정 협의기구 구성 ▲상용차부문 미래차 전략산업 육성 로드맵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우버스 매각에 관한 요구를 울산시에 전달했다.

2020년 3월 대우버스 대주주인 백성학 영안그룹 회장은 대우버스 울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노조에 일방 통보했다. 한국공장을 닫고 베트남에서 만든 차량을 역수입해 판매하겠다고 알렸다. 노조의 울산공장 정상화 촉구 투쟁에도 사측은 같은 해 6월 12일 공장 휴업 공고를 붙이고 본격 먹튀를 시도했다.

법원이 노조가 사측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위반금지 가처분 신청을 2020년 7월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합의 없이 부품 국외반출, 울산공장 수주·생산 전면중단, 국외공장 생산 버스 국내 역수입·판매를 모두 금지한다”라며 인용했다.

법원 인용 결정으로 사측 먹튀 계획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사측 변화는 없었다. 대우버스는 2020년 10월 대우버스 생산직·사무직 노동자 447명 중 377명을 정리해고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 어버이날 두 노동자 죽음, 자본·노동부·감찰 합작 똑같은 자본·정부 산재 대처 ...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

5월 8일 어버이날 울산 현대중공업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중대재해로 두 노동자가 숨졌다.

5월 8일 8시 40분쯤 현대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원유 운반선 상부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2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창사 이래 469번째 죽음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10일 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에 유사한 추락 사망사고가 있었다. 똑같은 원인으로 산재사망 사고가 반복해 발생했다” 라고 꼬집었다.

현대중공업은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중지 범위를 정할 수 없다며 미적거리다 금속노조가 기자회견과 지청 면담을 벌인 10일 저녁 8개 독 가운데 5개 독의 고소작업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사인이 명확히 나와 있는 사망진단서를 두고 부검을 강행했다. 지부는 “사망진단서에 외인사, 추락, 비의도적 사고로 명시돼 있다” 라고 밝혔다. 노조는 “사망한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검찰의 만행이다” 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노동부 울산지청에 ▲중대재해 연쇄 발생 현대중공업 대표 자 한영석 구속 처벌 ▲현대중공업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시스템 진단 시행 ▲산재사망 중단 위해 안전보건 위반사항 즉각 조치 가능한 근로감독관 상주 등을 요구했다.

5월 8일 21시 34분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열연공장에서 슬라브를 이송하는 워킹빔을 점검하던 노동자가 작동 중인 설비에 머리가 끼여 사망했다. 재해자 머리가 끼이는 충격이 있었으나 설비는 계속 작동했다. 21시 50분쯤 동료들이 바닥에 쓰러진 재해자를 발견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고가 난 현장은 대형 워킹빔이 자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협착위험이 항상 존재했다. 현대제철은 노동자 출입을 차단하거나 설비 신체접촉을 막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작업자 신체를 감지하고 충격이 있을 때 작동을 중단하는 센서도 설치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위험요소가 너무나 명백한데 현대제철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라고 규탄했다. 노조가 확인한 결과 사고 발생 장소와 비슷한 두 곳의 가열로 하부 역시 안전조치가 거의 없었다. 언제든 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금속노조는 ▲노동자를 죽인 살인자 현대제철 사업주 즉각 구속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에 따른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동일·유사 설비 즉각 작업중지 명령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체 특별감독 실시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 전 과정에 현대제철 원·하청 노동자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역 간부들의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노조는 노동부 천안지청의 미지근한 대응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노동부는 현대제철이 즉시 철저한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천안지청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해 동일·유사 설비 작업중지 명령을 해야 하지만, 재해 48시간이 지나서야 극히 일부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라며 노동부 천안지청이 노동부가 만든 운영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산재 예방보다 속도와 효율이라는 생산제일주의, 노동자의 생명은 언제나 이윤보다 뒷전인 기업의 탐욕, 사고를 낸 기업의 방패막이 노릇만 하는 노동부 모두 중대재해의 원인이자 원흉이다” 라고 꾸짖었다.

노조는 “살인기업을 세상에서 몰아내는 투쟁에 나서자. 중대재해 처벌법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온전하게 바꾸자” 라며 행동을 호소했다.